

# 무너진 기업·빛에 묶인 개인, 이제 광주서 살린다

내년 3월 회생·파산 전담하는 ‘회생법원’ 개원 예정  
재판 지연 해소·사법 접근성 개선…지역경제 회복 ↑

기업과 개인의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 하는 광주회생법원 신설이 본격 추진되면서 호남과 제주지역의 도산사건 재판 구조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회생법원은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청사 재배치와 조직 구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회생법원은 법인 및 개인 회생·파산, 면책 등 이른바 ‘도산사건’을 전담하는 특수법원으로, 광주뿐 아니라 전북과 제주까지 관할하게 된다.

현재 광주와 전주, 제주지법에는 매년 2만건이 넘는 도산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기업 구조조정과 개인 채무조정 수요가 급증했지만, 기존에는 민사사건을 병행하는 재판부가 도산사건을 처리해 전문성과 속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광주지법 도산사건은 2022년 8600여건에서 최근 1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늘었다.

하지만 전담 재판부가 부족해 기업회생 사건의 경우 구조조정 시기를 놓치거나, 개인회생·파산 사건에서도 개시 결정과 인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회생법원 신설의 가장 큰 변화는 ‘전담성’이다. 현재 도산사건을 맡고 있는 법관 상당수가 다른 민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지만, 회생법원이 출범하면 회생·파산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꾸려진다.

김대현 광주지법 판사는 “회생법원은 단순히 재판부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법관들이 도산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사 재배치 작업도 속도도 내고 있다. 광주지법은 본관과 별관을 중심으로 개인회생위원실과 민사합의과를 재배치하고, 별관 3층에는 회생법원 법원장실과 사무국장실, 총무과, 판사실 등을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새롭게 들어서는 통합도산센터에는 회생·파산 상담과 절차 안내를 담당할 전담 창구도 마련된다.

법관 증원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광주지법에서 도산사건을 맡는 법관은 5명이지만, 회생법원 체제로 전환되면 재판부와 인력이 모두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법원회생·파산 합의부와 개인회생 단독 재판부가 확대되면 사건처리 속도는 체감할 만큼 빨라질 것이라는 게 법원 안팎의 평가다.

상급심을 담당하는 광주고등법원도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회생법원은 관할 집중 제도를 통해 전북·제주 사건도 광주로 접수될 수 있어 사건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회생·파산 항고 사건 역시 늘어날 수 있어 법원행정처에 법관 증원을 요청한 상태다.

회생법원 신설은 단순한 사법 인프라 확충을 넘어 지역경제와 직결된다는 점에 서 의미가 크다. 회생·파산 제도는 실패

한 기업과 개인을 신속히 정리하고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회복 장치’이기 때문이다. 재판이 지연될수록 기업은 존속 가능성을 잃고, 개인은 채무 부담에 짓눌려 경제 활동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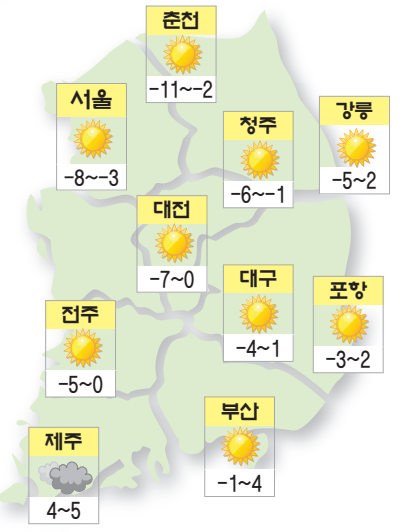
부산·수원 회생법원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해당 지역에 회생법원 개원 이후 도산사건 평균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며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기헌 광주고법 판사는 “광주회생법원이 출범하면 기업과 개인이 타 지역까지 가지 않고도 전문적인 회생·파산 절차를 신속히 밟을 수 있게 된다”며 “결국 지역민의 사법 접근권과 경제적 회복력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 맑음	07:41	달궀	14:07
☁️ 맑음	17:30	달궀	03:59



광주	☁️	-3~-1
목포	☁️	-2~-1
여수	☀️	-1~-3
순천	☁️	-3~-1
구례	☀️	-5~-1
광주	☁️	-3~-2
진남	☁️	-2~-2
진남	☁️	-2~-3
진남	☁️	-2~-3
진남	☁️	-2~-2

목포	미물(고)	11:12 / 23:13
여수	샘물(저)	03:51 / 16:53
여수	미물(고)	06:24 / 18:31
여수	샘물(저)	12:31 / ---:---

## 광주·전남 ‘병오년’ 첫 해돋이 가능

광주 오전 7시 41분…오후부터 눈 예보

새해 첫날 광주·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해돋이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3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026년 1월1일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해돋이 관측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아 해상에서는 관측이 어렵겠으나, 육상에서는 구름 사이로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은 새해 첫날 오후 6시부터 전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해 2일에는 광주·전남 서부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 적설량은 1~2일 사이 1~3cm다.

특히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 안팎이 되겠으며, 낮 최고기온도 영

하권에 머물겠다.

세부적으로 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3도로 예보됐다. 2일은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로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강한 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야외활동 시 보온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빙판길과 눈길 교통안전, 강풍·폭풍으로 인한 시설물 관리와 항공·해상 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천문연구원이에 발표한 새해 1월1일 해돋이 시각은 고흥 외나로도 오전 7시36분, 완도 보길도 오전 7시40분, 광주 오전 7시41분, 무안 도리포·영광 가마미 오전 7시43분, 신안 가거도·흑산항 오전 7시45분, 신안 홍도 오전 7시46분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휴식공간으로 변신한 시민홀 30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을 찾은 시민들이 발집모양을 한 시민홀 편의공간에서 민원업무와 휴식을 취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광산구, 치매극복선도단체 등 55곳 확대

광주 광산구가 치매극복선도단체와 치매안심가맹점을 총 55곳으로 확대했다.

30일 광산구에 따르면 치매극복선도단체와 치매안심가맹점은 모든 구성원이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며 치매 환자를 배려하는 지역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광산구에는 치매극복선도단체 19개소와 치매안심가맹점 12곳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치매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치매극복선도단체는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마을건강센터, 참뚝노인복지센터, 사단법인

하남효사랑 3개소이다. 치매안심가맹점은 아이비플라워 등 총 21개소이다.

지정된 단체와 가맹점은 앞으로 광산구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치매 극복 및 치매 예방 인식개선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산구 치매안심센터(062-960-6889)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치매극복선도단체와 치매안심가맹점은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안전망이”며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특위 진상규명 아쉬움”

철저한 조사 촉구…국정조사·특별법 개정 등 기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활동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국회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이날 종료됐다.

올해 1월16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가 구성됐다.

특위는 지난 1년간 전체 회의 8회,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소위원회 5회,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소위원회 1회 등 총 14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특위의 명칭에 진상규명이 가장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소위가 단 1회만 개최됐다는 것은 매우 아쉽다”며 “특위는

법률인 심사관까지 부여받아 12·29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참사 4개월 만에 제정했지만, 유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위의 성과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전달했다”며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뤄질 철저한 진상조사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한 특별법 개정 등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광주 구청장들 “마을버스 운영난에 올스톱 위기”

시에 50% 재정 지원 요구…교통약자 불편 우려

광주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운영난으로 한계 상황에 봉착한 마을버스가 멈추는 순간 가장 큰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간다”며 시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광주구청장협의회는 30일 남구에서 정례회를 열고 ‘마을버스 시·구 매칭 재정지원’ 안건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광주시와 자치구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의 재정 지원을 통해 마을버스 운행 중단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메우

는 핵심 교통수단이다. 대형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주거 밀집지역과 골목길을 오가며, 노인·장애인·학생 등 교통 약자의 일상 이동을 떠맡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승객 감소와 연료비 급등이 겹치면서 2020~2021년 누적 운행 손실액은 19억3700만원에 달한다.

시와 자치구는 2022년 한 차례 손실액 전액을 지원했지만, 이후 지원은 연료비 인상분에 한정된 ‘임시 처방’에 그쳤다.

지난해 일부 손실액이 한시 지원됐으나 구조적 적자는 해소되지 않았다.

문제는 자치구 재정 여건도 빠듯하다는 점이다. 세입 감소로 추가 예산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치구들은 시의 재정 참여 없이는 마을버스 운영을 더 이상 떠맡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청장협의회는 “마을버스는 특정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닌 광주 전체의 생활 교통 문제”라고 강조했다.

마을버스 업계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광주지역 5개 마을버스 회사로 구성된 마을버스운송조합은 지난해부터 손실액



광주 구청장협의회는 30일 남구에서 정례회를 열고 ‘마을버스 시·구 매칭 재정지원’ 안건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김이강 서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임택 동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박병구 광산구청장

추가 지원을 요구해왔으며, 지난 9월에는 광주시청 앞에서 시·구 매칭 재정지원 제도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업계는 “운행 중단이 현실화될 수 있

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마을버스 재정지원의 1차적 책임은 자치구에 있다”며 시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

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 생활과 직결된 교통 문제를 두고 시와 자치구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안건을 제안한 김병내 남구청장은 “마을버스가 멈추면 주민들의 병원·시장·학교 이동 수단이 곧바로 없어진다”며 “이는 단순한 경영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이동권과 생활권이 위협받는 문제”라고 말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조만간 광주시에 공식 건의문을 전달하고, 주민 불편 해소 차원의 시 재정 참여를 재차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 마을버스(2025년 11월 기준)는 9개 노선(서구 760번, 남구 713번·714번·715번, 북구 777번·788번, 광산구 700번·701번·720번)이 운행 중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